

강원경제 개발호재에 3.0% 성장

건설업 성장 총소득 오름세 견인

도내 지역내총생산과 지역내총소득이 우리나라의 2%대 수준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통계청의 '2015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지역내총생산은 3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서비스업(15.4%)과 건설업(7.3%)의 총생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했다. 서비스업 비중은 전년보다 0.9% 감소

한 70.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어업도 5.6%에서 5.4%로 줄었다. 반면 건설업 비중은 9.0%에서 9.6%로 소폭 늘었다. 도내 지역총소득도 전국의 2.2%인 34조원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 건설업이 지역내총생산 증가, 경제 구조 내 비중 상승 등 기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기반공사와 각종 지역 개발호재의 영향으로 건설 부문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풀이 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도 실국장 인사 대대적 인적쇄신

기존 국장급 5명 교육 파견
한 두명 제외 모두 '새 얼굴'
내년 퇴직 58년생 대거 이동

강원도가 29일로 예정된 실국장 인사를 통해 대대적인 인적쇄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실국장 인사를 통해 최대 9명이 국장급으로 승진될 전망이다. 우선 57년생인 박만수 인재개발원장과 전용수 강원테크노파크 정책협력관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자리가 생겼다. 어재영 농정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후임국장은 계재철 유통원예과장이

유력하다. 여기에 시도지사협의회 기획사무국장장 김한수 글로벌투자총상국장의 행자부 파견으로 추가 승진요인이 발생했다. 또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국장급 교육 파견 인원도 한명이 늘어났다. 강원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본부장으로 백승호 기획관이 이동하며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올림픽운영국에 2급 본부장 자리도 새로 생긴다. 사의를 표명한 이청룡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후임으로 국장급 이동이 예상되는 등 추가 승진요인이 발생했다.

기존 국장급들 가운데 5명이 장기교육 대상자로 파견을 가면서 이번 인사로도 청 국장급 자리에 한두명을 제외하고 모

두 새얼굴로 교체될 전망이다. 내년 퇴직 예정인 58년생들에 대한 인적쇄신도 이번에 함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상 품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오원중 경제진흥국장을 제외한 도청내 58년생 국장 전원이 주요 업무에서 배제돼 도청 외부 기관으로 이동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승진대상자로는 △고영선 도의회홍보담당관△최정집 비서실장△전장준 관광마케팅과장△박재복 관광개발과장△김봉현 문화예술과장△장대순 경제정책과장△전홍진 통상지원과장△박종훈 안전총괄과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원주 부시장에는 서경원 전글로벌사업단장, 속초부시장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영월 부군수 최봉길 사회적경제과장, 정선부군수 신주호 레고랜드 지원과장, 고성부군수 홍성호 동계조직위 부장이 내정되는 등 시·군 부단체장도 대거 교체된다. 시·군과의 막판 협의 결과에 따라 최대 8명의 부단체장이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할 비서실장은 안성배 비서관의 승진, 발탁이 유력하다. 백오인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회장 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제2회 임시총회에 참석한다.

평창군 내년 국·도비 1357억 확보

올해 예산보다 145억원 증가
올림픽경기장 환경개선 투입

평창군이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해 지역개발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평창군은 2017년도 예산으로 국비 1121억 원, 도비 236억 원 등 모두 1357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도비예산 1212억 원 보다 145억 원 늘어난 수치로, 평창군 역대 국도비 예산 중 최대 규모다. 당초 내년도 현안

사업인 올림픽경기장 주변 환경개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국회 최종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고보조금 116억 원과 특별교부세 83억 원 등 199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재해위험지구 개선 41억 원, 흥정천·평창강 하천재해예방 35억 원, 생태하천 복원 14억 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91억 원, 권역단위종합개발 2개소 14억 원, 방림계촌지역 농어촌생활우수개발 21억 원, 보건소 이전 신축 41억 원 등이다. 또 평

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사업으로 급수체계구축 53억 원, 하수도시설 확충 22억 원,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19억 원, 올림픽특구 도시경관지원 72억 원, 월정사 문화재 보수정비 12억 원, 간판개선 2억 원, 경관림조성 6억 원 등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사상 최대 국비 예산 확보는 을초부터 정부 부처와 신규사업에 대해 적극 협의하고 매달 국비 확보 보고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현태

공공조달 '규제대못' 뺐는다

국가계약법 제정 21년만에 전면 개편... 中企 진입장벽 낮춰

기술투자비 평가기준 완화 등
조달청, 44건 개선과제 단행

건설기술개발투자비 평가기준 등 공공 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진입장벽과 각종 불합리한 절차 44건에 대한 개선조치가 단행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달규제 혁신방안' 소관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중소상공인 판로지원 강화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춘 이번 혁신방안은 지난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래 21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대한 개편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달제도도 관리체계를 비롯해 총 4개 분야, 139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모든 개선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도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도 민관합동 조달혁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상 상이 규정을 발굴하고, 2015년 조달사업(5만 6000건) 전수조사 및 업체 건의사항(130건) 등을 분석해 4개 분야 44건의 소관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 개선과제를 보면 벤처, 창업기업 포함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5건을 비롯해 불필요한 기준 및 절차 11건, 적정단가 보장 등 기업부담 경감 18건, 기술력 있는 기업의 시장 진입 지원 10건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술개발투자비 인정이 기준 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평가 개선과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중심제)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 등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8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외에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선 및 중기간 경쟁제품 직정이윤 보장방안 마련, 물품 구매 적격심사제 관련 규정 일원화 등도 추진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기업인을 포함해 창업,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벤처, 창업기업의 제

품을 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우수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의 이용 확대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불합리한 조달 기준과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기업불편을 해소하고 적정단가 보장 및 조달비용 감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체계를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방송권기자 skbong@

기술개발투자비 평가 완화... 중소기업 입찰기회 확대 기대

뉴스특보기

공공조달시장 규제 개선

공공조달시장의 44개 규제 개선과제 중 건설업계의 이목을 사로잡는 것은 단연 건설기술개발투자비 평가기준 개선이다.

이르면 내년 3월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 관련 기준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자들의 공공공사 입찰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설업계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투자비 평가는 기업의 매출액 대비 투자비를 적격심사 또는 PQ 등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 개정으로 투자비 인정범위가 대폭 축소된 이후, 기술개발투자비 평가는 업체에 커다란 규제로 작용돼 왔다.

세액공제 신청분에 한해서만 투자비

를 인정해 세제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와는 별개로, 건설사들의 입찰참가 등 수주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기술개발 투자여건이 열악한 중소, 지역건설사에는 입찰시장 진입 및 수주기회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벽'으로 여겨지고 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 및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중평제)에서도 일부 등급제 공사의 경우 기술개발투자비 평가가 중소기업사의 입찰참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에는 이미 지방계약에 신규 개정을 통해 기술개발투자비율 인정기준을 업종 평균 대비 150%에서 100%로 낮추고 등급구간별 점수차도 절반으로 축소한 바 있다.

조달청도 이를 개선과제로 선정, 적정수준의 입찰경쟁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최하위등급 평점을 상향조정하거나 평가등급 간 격차를 축소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하는 PQ 기준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이번 조달규제 혁신방안이 국가 및 지방계약 법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늦어도 내년 3월까지의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심제 및 중평제를 포함, 중소·지역건설사들의 입찰참가 및 수주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이와 더불어 중심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도 개선과제에 포함시켰다.

중점 검토사항은 고난이도 공사만 대상으로 하는 물량심사 부문으로, 물량내역 수정입찰 활성화 및 업체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도입한 가격제도 운영사항을 따져볼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물량심사 집행 및 가점 적용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내년 말까지 지속적인 입찰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증할 방침이라고 조달청은 밝혔다. 방송권기자